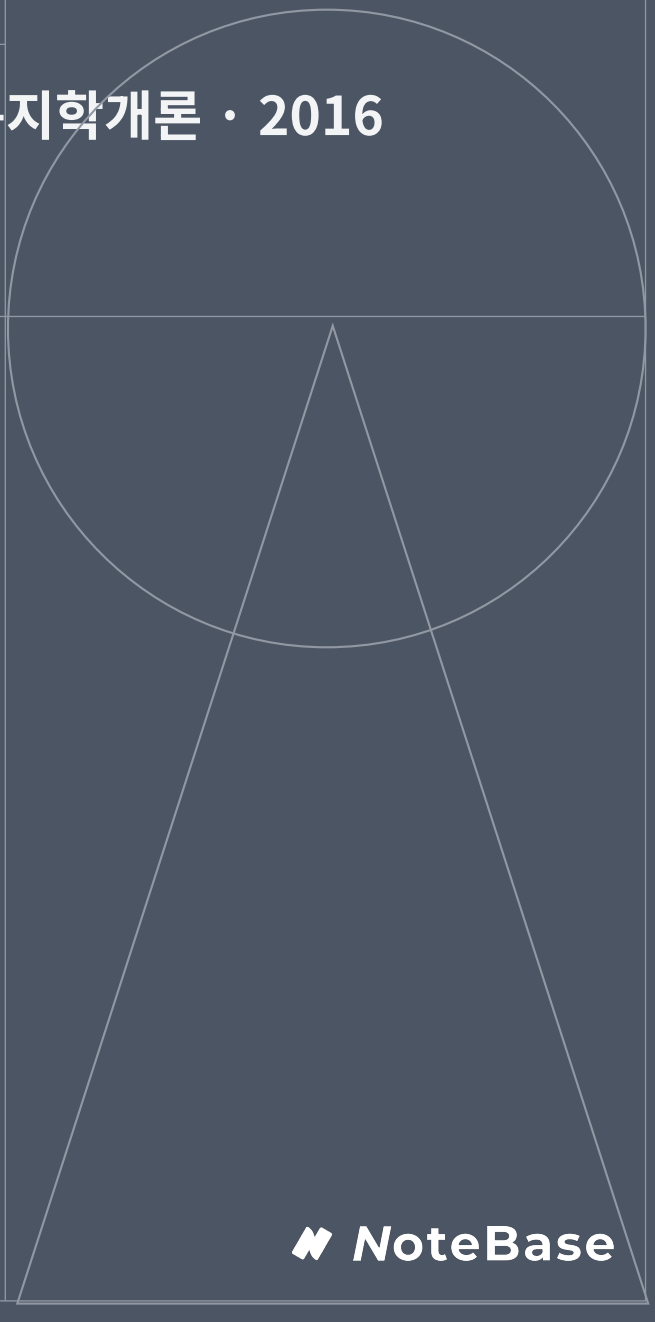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사회복지학개론 · 201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사회복지학개론 · 2016

공무원/국가직/9급 · 사회복지학개론 · 2016

문 1. 탈상품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팔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② 에스핑 앤더슨(Esping Andersen)은 탈상품화 수준에 따라 사회복지모델을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로 구분하였다.

③ 탈상품화 수준이 높을수록 권리로서의 복지가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④ 일반적으로 자유주의복지국가보다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의 탈상품화 수준이 높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의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는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구분과 다르다. 그는 탈상품화와 계층화 등의 특성에 따라 복지국가를 **자유주의·보수주의·사회민주주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O: 탈상품화는 노동자가 **노동력을 팔지 않고도 사회적으로 적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이다.
실업·질병·노령 등으로 근로소득이 없어도 사회보장급여를 통해 생활할 수 있다면 노동시장에 대한 의존이 줄어든다.

② X: 에스핑 앤더슨은 탈상품화 수준, 사회적 계층화, 국가·시장·가족의 복지 제공 관계 등을 바탕으로 복지국가를 **자유주의·보수주의·사회민주주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선지의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를 이 세 유형으로 고쳐야 한다. 잔여적 복지는 가족과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복지가 보충적으로 개입한다고 보는 반면, 제도적 복지는 복지를 사회의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기능으로 본다는 구분이다.

③ O: 탈상품화 수준이 높다는 것은 시장에서 얻는 소득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이 뒷받침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복지를 시혜보다 **사회적 권리로 보장**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④ O: 자유주의복지국가는 시장을 통한 자립을 중시하여 탈상품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는 **보편적이고 충분한 급여**를 통해 생활을 보장하므로 일반적으로 자유주의복지국가보다 탈상품화 수준이 높다.

NoteBase

문 2. 민영보험과 사회보험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민영보험은 자발적 가입을, 사회보험은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② 민영보험은 계약에 의해 급여수준이 결정되며, 사회보험은 법률에 의해 급여수준이 정해진다.

③ 민영보험은 최저수준의 소득 보장을, 사회보험은 지불능력에 따른 급여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④ 민영보험에서 보험급여액은 개별적 공평성이, 사회보험의 보험급여액은 사회적 적정성이 강조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은 두 보험의 보장 목적을 뒤바꾸었다. **최저수준의 소득 보장**은 사회보험이 지향하는 목적이며, 민영보험은 개인의 **보험료 지불능력에 따라 선택한 보장**을 제공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민영보험은 개인이 필요와 의사에 따라 보험회사와 계약하여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도록 **법정 적용 대상자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가입 여부를 개인의 선택에만 맡기지 않는다.

② O: 민영보험의 급여수준은 가입자가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보험의 급여수준과 지급 요건은 법률에 근거한 제도적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가입자가 개별 계약으로 자유롭게 정하는 방식과 구별된다.

③ X: **최저수준의 소득 보장은 사회보험의 목적**에 해당한다. 사회보험은 질병·노령·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소득이 줄거나 지출이 늘 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민영보험은 개인이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장 내용과 수준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선지의 '민영보험'과 '사회보험'에 연결된 목적을 서로 바꾸어야 한다.

④ O: 민영보험의 개별적 공평성은 개인의 위험과 납부 보험료에 상응하는 급여를 중시한다는 뜻이다. 사회보험의 **사회적 적정성**은 보험료와 급여의 개별적 대응만을 따지기보다 생활 보장에 필요한 수준을 중시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에서는 소득재분배와 사회적 연대가 강조된다.

NoteBase

문 3.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의하는 다음의 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① 공공부조
② 사회안전망
③ 사회복지서비스
④ 사회서비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복지뿐 아니라 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담·재활·돌봄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사회서비스**이다.

공통 해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는 지문에 제시된 제도를 '사회서비스'로 정의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이 제공 주체가 되며, 지원 대상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다.

사회서비스는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다양한 생활 영역을 포괄한다.
상담·재활·돌봄·정보 제공·관련 시설 이용·역량 개발·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라는 점이 핵심이다. 지문은 특정한 복지사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 분야의 지원을 포괄하는 법정 정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그 명칭은 사회서비스이다.

NoteBase

문 4.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사회보험제도는 독일의 산업재해보험제도이다.

② 영국의 국민보험법(1911)은 노령연금과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었다.

③ 미국은 사회보장법(1935)의 제정으로 노령연금, 산재보험, 공공부조의 세 가지 제도가 도입되었다.

④ 베버리지보고서는 사회보험의 원칙 가운데 하나로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의 기여금을 낼 것을 제시하였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베버리지보고서의 **정액기여 원칙**은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같은 보장에 대해 같은 금액의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원칙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은 독일이 **1883년에 도입한 질병보험**이다. 독일의 산업재해보험은 그다음인 1884년에 도입되었으므로, 최초의 제도를 산업재해보험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② X: 영국의 국민보험법(1911)이 도입한 것은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이다. 노령연금은 이미 1908년 노령연금법으로 도입되었으며, 당시에는 보험료 기여 없이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는 제도였다.

③ X: 미국 사회보장법(1935)의 주요 내용은 노령연금, **실업보험**, 공공부조이다. 선지의 '산재보험'을 '실업보험'으로 고쳐야 한다. 산재보상제도는 1935년 이전부터 주별 법률 등을 통해 발전하고 있었다.

④ O: 베버리지보고서(1942)는 사회보험의 원칙으로 **정액기여**를 제시하였다. 이는 같은 보장을 받는 가입자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의 기여금을 부과한다는 뜻이다. 소득에 일정 비율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소득비례 방식과 구별된다.

NoteBase

문 5. 사회복지의 가치와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간존중: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가치, 품위, 존엄성을 갖는다.

② 사회연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공통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호책임을 갖는다.

③ 개인주의: 사회는 개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

④ 자기결정: 모든 사람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신과 관련된 것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갖는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균등한 기회를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평등, 그중 기회의 평등**에 관한 설명이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 및 자기 책임을 중시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인간존중은 모든 사람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다는 원리이다. 소득이나 능력,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존엄한 존재로 대우**해야 한다는 뜻이다.

② O: 사회연대는 사회 구성원이 서로 의존하며 공동의 위험에 대해 **상호책임**을 진다는 원리이다. 질병이나 실업처럼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위험에 공동으로 대비하고 부담을 나누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③ X: 차별 없이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은 **기회의 평등**에 해당한다. 이는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한다는 뜻이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 및 자기 책임을 중시하는 관점이므로, 선지의 '개인주의'를 '평등'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자기결정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문제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자유를 존중하는 원리이다. 다만 그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무제한 행동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6.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다음의 연구설계에서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한 지 1주일 이내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불안완화'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17명의 학생들에 대해서 프로그램 시작 전에 불안증 수준을 측정하는 검사지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2주에 걸쳐 하루 2시간씩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종료 시까지 남은 10명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검사지를 통해 불안증 수준을 재측정하는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사후검사 결과 사전검사에 비해 불안증 수준이 감소하였다. 이에 이 프로그램은 불안증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① 도구효과(instrumentation effect)

② 성숙효과(maturation effect)

③ 외부사건(history)

④ 연구대상의 상실(experimental mortality)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도구효과는 **검사지나 측정 기준의 변화** 때문에 점수가 달라지는 현상이다. 이 연구는 사전·사후에 **동일한 검사지**를 사용했고 측정 방식이 바뀌었다는 단서도 없으므로, 도구효과를 지적하기 어렵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내적 타당성은 관찰된 불안 수준의 감소를 프로그램의 효과로 볼 수 있는 정도이다. 이 연구는 비교집단 없이 한 집단에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했으므로, 프로그램 이외의 원인으로 불안이 감소했을 가능성을 구별하기 어렵다.

① X: 도구효과는 검사도구, 관찰자 또는 채점 기준 등 **측정 방식이 달라져** 측정값이 변하는 현상이다. 사례에서는 사전·사후에 동일한 검사지를 사용했고 측정 기준의 변화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점수 감소를 도구의 변화 탓으로 설명할 근거가 부족하다. 같은 검사를 반복하여 응답이 달라지는 검사효과는 도구효과와 구별한다.

② O: 성숙효과는 처치와 무관하게 **시간 경과에 따른 대상자 내부의 변화**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피해를 당한 지 1주일 이내인 학생들의 불안이 프로그램 진행 기간인 2주 동안 자연스럽게 완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비교집단이 없으므로 이러한 자연적 변화와 프로그램의 효과를 구별하기 어렵다.

③ O: 외부사건은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사이에 발생한 **프로그램 외부의 사건**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사례에 구체적인 외부사건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비교집단 없이 프로그램 참여자만 관찰했으므로 그 기간에 발생한 다른 사건이 불안을 낮추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성숙효과가 대상자 내부의 자연적 변화라면, 외부사건은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의 영향이다.

④ O: 연구대상의 상실은 연구 도중 참여자가 탈락하는 현상이다. 처음 17명 중 사후검사에는 10명만 남아 **7명이 중도탈락**했다. 탈락 여부가 불안 수준과 관련되어 있다면, 남은 참여자들의 특성이 달라져 불안 감소가 프로그램의 효과처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탈락자의 특성과 영향을 확인하지 않은 채 남은 10명의 결과만으로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다.

NoteBase

문 7. 사회서비스 바우처(vouche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종의 교환권으로 사용처에 제한을 둔 상태에서 수급자에게 선택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급여 형태이다.

②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의 특성을 혼합한 것으로 두 급여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③ 공급자 지원방식의 대표적인 정책수단이다.

④ 이 방식은 서비스 생산자들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바우처는 공급기관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서비스 구매권을 부여하는 **수요자 지원방식**이다.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선택하면 그 이용에 따라 비용이 지급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바우처는 정해진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교환권이다. 현금처럼 아무 용도로 쓸 수는 없지만, **허용된 서비스와 제공기관의 범위 안에서 선택**할 기회를 수급자에게 준다.

② O: 현금 급여는 선택의 자유가 크지만 정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 현물 급여는 용도를 통제하기 쉽지만 이용자의 선택을 제한하기 쉽다. 바우처는 **용도 제한과 이용자 선택을 결합**하여 두 급여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형태이다.

③ X: 바우처는 **수요자 지원방식**의 대표적인 정책수단이다. 정부가 공급기관에 운영비 등을 직접 지원하는 공급자 지원방식과 달리, 이용자에게 구매권을 부여하고 이용자가 선택한 기관에 서비스 이용 비용이 지급되도록 한다. 최종적으로 제공기관이 비용을 받더라도 지원의 기준이 이용자의 선택과 이용이므로 공급자 지원방식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④ O: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면 기관들은 이용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게 된다. 바우처는 이러한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이는 제도의 목적이며, 도입만으로 질 향상이 반드시 보장된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8. 2015년 7월 시행(2014년 12월 30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변화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조항이 신설되었다.

②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③ 교육급여를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④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은 **개정 전부터 제28조에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를 2014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신설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X: 제28조의 자활지원계획 수립 조항은 **개정 전부터 존재**하였다.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가구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제1항과 제3항의 행정주체 표현을 정비했으며, 계획 수립 조항 자체를 신설한 것은 아니다.

② O: 제2조제11호에 기준 중위소득의 정의를 두고, 제6조의2에 그 산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이를 바탕으로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정하도록 하였다.

③ O: 개정된 제12조제2항은 교육급여를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급여별 특성에 맞게 소관을 나눈 변화이며, 교육급여의 실제 실시 주체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도교육감으로 정하였다.

④ O: 개정된 제11조제2항은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주거급여의 기준과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별도 법률에 규정하도록 바꾸었다.

NoteBase

문 9. 우리나라의 현행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지원제도로서 일정 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의욕을 높여서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제도이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한다.

④ 근로장려금의 크기는 소득구간이 높아질수록 비례하여 커진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소득구간이 높아질수록 비례하여 커진다'는 설명은 근로장려금의 전체 산정구조와 다르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점증·평탄·점감** 구간을 거치므로, 일정 구간에서는 유지되고 이후에는 줄어든다.

선지별 해설

① O: 근로장려세제는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의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저소득 근로자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② O: 근로장려세제는 일을 통해 소득을 얻는 저소득층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유도하고 실질소득을 보충한다.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이므로 납부할 소득세가 없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③ O: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이다. 이 조항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환급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에서 신청자격과 장려금 산정 등도 정한다.

④ X: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모든 구간에서 비례하여 커지지 않는다. 같은 가구유형을 기준으로 총급여액 등이 늘어나면 **점증구간에서는 증가하고, 평탄구간에서는 최대액이 유지되며, 점감구간에서는 감소**한다. 따라서 소득 증가에 따라 장려금이 커진다는 설명은 점증구간에 한정해야 한다.

NoteBase

문 10.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제의 연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60년대 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 조항을 헌법에 포함함으로써, 향후 사회복지입법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② 1980년대 초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으로 국민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다.

③ 1990년대 후반부터 분권교부세에 근거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 이루어졌다.

④ 2000년대 초에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을 근간으로 보육서비스 지원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1962년 개정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명문화하였다. 국민의 생활 보장을 헌법상 권리로 규정하여 이후 사회복지입법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O: **1962년 개정 헌법 제3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명시하였다. 같은 조 제2항에는 국가의 사회보장 증진 노력 의무를 두어, 국민의 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입법의 헌법적 근거를 강화하였다.

② X: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은 1980년대 초가 아니라 **1973년**이다. 석유파동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행이 연기되었고,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정비된 뒤 **1988년 1월**에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다. 법 제정 시기와 제도의 실제 시행 시기를 구분해야 한다.

③ X: 분권교부세를 재원으로 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은 1990년대 후반이 아니라 **2005년부터** 이루어졌다. 일부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면서, 이양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분권교부세를 도입하였다.

④ X: 「영유아보육법」은 2000년대 초가 아니라 **1991년 1월**에 제정되었다.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위한 보육사업의 법적 기반이 된 법으로,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의 근거라는 설명보다 법의 제정 시기를 잘못 제시한 것이 문제이다.

NoteBase

문 11. 사회복지사들이 당면하는 까다롭고 복잡한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해 로웬버그(Lowenberg)와 돌고프(Dolgoff)는 윤리원칙의 적용 순서를 규정한 윤리적 원칙 심사표(Ethical Principles Screen)를 제시한다. 여기에 포함된 원칙들의 적용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삶의 질의 원칙
ㄴ.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ㄷ. 생명보호의 원칙
ㄹ. 진실성과 정보개방의 원칙
ㅁ. 최소한 손실의 원칙
ㅂ.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ㅅ.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

① 1순위: ㄱ, 2순위: ㄷ, 3순위: ㅁ, 4순위: ㅅ, 5순위: ㄴ, 6순위: ㄹ, 7순위: ㅂ
② 1순위: ㄷ, 2순위: ㅂ, 3순위: ㅅ, 4순위: ㅁ, 5순위: ㄱ, 6순위: ㄴ, 7순위: ㄹ
③ 1순위: ㅁ, 2순위: ㄱ, 3순위: ㄹ, 4순위: ㅅ, 5순위: ㅂ, 6순위: ㄷ, 7순위: ㄴ
④ 1순위: ㅅ, 2순위: ㅁ, 3순위: ㄱ, 4순위: ㄹ, 5순위: ㄷ, 6순위: ㅂ, 7순위: ㄴ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윤리원칙이 충돌하면 **상위 원칙을 우선**한다. 생명보호가 가장 앞서며, 평등과 불평등은 자율성과 자유보다,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은 진실성과 정보개방보다 우선한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ㄷ → ㅂ → ㅅ → ㅁ → ㄱ → ㄴ → ㄹ

ㄷ. 생명보호의 원칙: 클라이언트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다른 윤리원칙과 충돌하더라도 **생명보호를 먼저 고려**한다.

ㅂ.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같은 처지의 사람은 동등하게 대우하되, 관련된 처지나 욕구가 다르면 그 차이를 고려하여 다르게 대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생명보호 다음에 놓이며, **자율성과 자유보다 우선**한다.

ㅅ.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자유를 존중한다. 다만 이 심사표에서는 자기결정의 존중이 앞선 생명보호와 평등의 원칙을 무조건 넘어서는 것은 아니므로 세 번째에 놓인다.

ㅁ. 최소한 손실의 원칙: 피해를 피할 수 없다면 **가장 적은 피해를 초래하는 대안**을 선택한다.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하기에 앞서 손실과 해악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네 번째이다.

ㄱ. 삶의 질의 원칙: 개인과 지역사회의 더 나은 삶을 증진하는 대안을 선택한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원칙 다음이며,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보다 앞서는 다섯 번째이다.

ㄴ.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개인의 사적 영역과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보호한다. 여섯 번째 원칙으로, **진실성과 정보개방보다 우선**하므로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해야 할 정보를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ㄹ. 진실성과 정보개방의 원칙: 클라이언트에게 관련 정보를 진실하게 알리는 것을 중시한다. 이 심사표에서는 일곱 번째이므로, 정보개방이 앞선 생명보호나 비밀보장 등의 원칙과 충돌할 때는 상위 원칙을 우선한다.

NoteBase

문 12. 「아동복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다음 행위 중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을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에만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② 아동의 신체를 손상시키는 학대행위

③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는 행위

④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아동 매매는 「아동복지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았다. 다른 세 행위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선지별 해설

이 문제는 각 금지행위에 대한 법정형에 벌금형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비교한다.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징역형만 규정한 경우에는 그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다.

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금지행위이다.
제71조제1항제1호의2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므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아동의 신체를 손상시키는 학대행위: 제17조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제7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므로,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다**.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는 행위: 제17조제6호의 금지행위이다. 이 역시 제7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므로, 아동 유기라는 이유만으로 징역형만 규정된 것은 아니다.

④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제17조제1호의 금지행위이며, 제71조제1항제1호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네 행위 중 문제의 조건에 해당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이 벌칙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NoteBase

문 13. 콤튼(Compton)과 갤러웨이(Galaway)에 따른 사회복지실천의 면접에 대한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면접을 위한 장(setting)이 있다.

② 면접자와 피면접자의 정해진 역할이 있다.

③ 구체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의도적 과정이다.

④ 자유로운 분위기를 위해 계약을 지양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계약을 지양한다'는 설명은 면접의 계약적 특성에 어긋난다. 사회복지실천의 면접은 목적과 진행 과정에 관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상호 합의한 계약**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사회복지실천의 면접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장(setting)**이 있다. 면접은 그 기관의 기능과 서비스 제공 상황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므로, 면접에서 다루는 내용도 이러한 맥락과 관련된다.

② O: 면접자와 피면접자는 **서로 구별되는 전문적 역할**을 갖는다. 사회복지사는 면접을 진행하며 문제의 이해와 해결을 돕고,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상황과 욕구를 표현하며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한다.

③ O: 면접은 정보수집, 문제의 사정, 변화의 촉진 등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도적 과정**이다. 어떤 내용을 묻고 탐색할지도 이러한 목적과 방향에 따라 정해진다.

④ X: 면접은 **계약에 기초하여 진행**된다. 여기서 계약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달성할 목표와 진행 과정, 각자의 역할 등을 상호 합의하는 것이다.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도 이러한 합의를 통해 면접의 목적과 참여자의 책임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계약을 지양한다'는 '상호 합의한 계약에 따라 진행한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14. 사회복지프로그램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 집단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구집단을 일반집단 - 위기집단 - 표적집단 - 클라이언트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위기집단은 위기를 겪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집단이다.

③ 표적집단은 위기집단 내에서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춘 집단이다.

④ 클라이언트 집단은 표적집단 중에서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수혜자집단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위기집단은 프로그램이 다루는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크거나 개입 욕구가 높은 집단**이다. 프로그램에 실제로 참여하여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클라이언트 집단**으로 구분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일반집단에서 위기집단, 표적집단, 클라이언트 집단으로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다. 일반집단은 사업 대상이 속하는 지역이나 인구 범주의 전체 집단이며, 그 안에서 **문제의 위험, 수혜 자격, 실제 서비스 이용**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다.

② X: 위기집단은 일반집단 중 프로그램이 해결하려는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크거나 관련 욕구가 높은 집단이다. **실제 프로그램 참여 여부로 구분하는 집단이 아니다.** 위기집단에 속하더라도 수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 서비스를 받는 집단은 클라이언트 집단이다.

③ O: 표적집단은 위기집단 중 해당 프로그램의 선정 기준을 충족하여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집단**이다. 문제에 취약하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표적집단이 되는 것은 아니며, 프로그램의 목적과 대상자 기준 등을 적용하여 범위를 정한다.

④ O: 클라이언트 집단은 표적집단 중 **실제로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집단**이다. 표적집단은 수혜 자격을 기준으로, 클라이언트 집단은 실제 수혜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므로 자격이 있어도 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클라이언트 집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NoteBase

문 15.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중앙정부가 기능적으로 우위인 이유로 제시되는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역별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쉽다.

②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평등과 소득재분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리하다.

③ 서비스의 안정성과 규모의 경제성을 제고하는 데 효과적이다.

④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제공에 적합하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지역별로 다른 복지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주민의 생활 여건과 수요를 가까이에서 파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강점**이다. 중앙정부는 전국적인 기준과 재원 조정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

선지별 해설

① X: 지역별로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기능**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활 여건과 지역의 자원·수요를 가까이에서 파악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제공 방식을 조정하기 쉽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는 중앙정부의 강점과 구별해야 한다.

② O: 중앙정부는 **전국 단위의 조세와 재정 조정**을 통해 소득계층 간 재분배뿐 아니라 지역 간 복지 격차의 완화를 추진하기에 유리하다.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에만 의존하면 복지 욕구가 크더라도 재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충분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③ O: 중앙정부는 전국적인 재원 기반을 활용하고 지역별 재정 여건의 차이를 조정하여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여러 지역에서 공통으로 필요한 업무와 자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면 고정비용을 다수에게 분산할 수 있으므로 **규모의 경제**, 즉 공급 규모가 커질수록 단위당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를 얻는 데 유리하다.

④ O: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고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는 **전국적인 재원 조달과 공급 조정**이 필요하다. 혜택이 특정 지역의 경계를 넘어 확산되면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판단과 재정만으로는 충분한 공급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는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가 순수한 공공재라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16. 사회복지실천의 통합적 접근방법이 등장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체계이론적 관점과 생태학적 관점을 활용하면서 이론적 기반이 형성되었다.

②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들이 점차 표준화되었다.

③ 제한된 특정문제에 대한 개입만을 중요시하는 전통적 사회복지 접근의 한계가 나타났다.

④ 인간과 환경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상호교류를 하는 하나의 체계로 이해되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의 '표준화되었다'는 표현이 부적절하다.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여러 문제와 환경을 함께 다루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해졌다.

선지별 해설

① O: 체계이론은 개인·가족·집단·지역사회 등을 서로 연결된 체계로 보고, 생태학적 관점은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과 적응에 주목한다. 두 관점은 문제를 개인 내부에만 한정하지 않고 **개인과 주변 체계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도록 하여 통합적 접근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② X: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는 표준화된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경제적 어려움, 가족관계, 건강 문제 등이 서로 얽혀 있으면 하나의 문제에 한정된 개입만으로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 이에 여러 실천방법과 자원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해졌다.

③ O: 전통적으로 분화된 실천방법은 특정 대상이나 문제에 집중하여, 여러 영역에 걸친 복합적인 문제를 함께 다루는 데 한계가 있었다. 통합적 접근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문제와 상황에 따라 실천방법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개인·집단·지역사회 수준의 개입을 연결하려는 접근이다.

④ O: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개인과 환경을 별개로 다루기보다 **지속적으로 상호교류하는 하나의 체계**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는 개인의 변화뿐 아니라 가족관계, 사회적 자원 등 환경의 변화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을 뒷받침한다.

NoteBase

문 17. 우리나라의 현행 노인복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으로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②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현금 급여이다.

③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포함된다.

④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질환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규정한다. 이들은 노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은 원칙적으로 **60세 이상으로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람**이다(「노인복지법」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따라서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한정한 부분이 잘못이며, 일정 소득인정액 이하라는 기준도 노인복지주택의 일반적인 입소요건이 아니다.

② X: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65세 이상이라는 연령요건 외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소득인정액에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반영된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수급대상자를 선별하는 현금급여이며,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아니다.

③ O: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로 구분한다. 노인복지관은 교양·취미생활과 사회참여 등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로당은 지역 노인의 친목과 여가활동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며, 노인교실은 취미생활·건강유지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④ X: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질환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인 사람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된 사람이 급여대상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 시설급여뿐 아니라 방문요양·방문목욕 등의 **재가급여**도 제공하므로, 집에서 생활하는 수급자도 이용할 수 있다.

NoteBase

문 18. 사회복지사로서 역할 수행 중 다음과 같은 성찰이 생길 때 이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개념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성찰 내용>
ㄱ. 기초생활수급자가 현재 빈곤한 상태인지만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면 이들이 빈곤한 상태로 이르게 되는 맥락을 간과하는 것이 아닐까?
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럴까?
ㄷ. 우리 시(군)에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을까?
ㄹ. 우리지역의 복지예산이 부족한데 일인시위, 거리행진 등을 통해 이것을 이슈화하면 추후에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개념>
A. 신빈곤
B. 상대적 빈곤
C. 사회적 배제
D. 정상화
E. 사회행동
F. 지역사회개발

① ㄱ: A, ㄴ: B, ㄷ: C, ㄹ: D
② ㄱ: C, ㄴ: A, ㄷ: D, ㄹ: E
③ ㄱ: E, ㄴ: F, ㄷ: B, ㄹ: C
④ ㄱ: F, ㄴ: D, ㄷ: E, ㄹ: A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빈곤에 이르게 된 과정과 사회 참여의 제약을 살피는 관점은 **사회적 배제**이다. 일을 하면서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은 근로빈곤을 주요 양상으로 하는 **신빈곤**과 연결된다.

NoteBase

대응 관계 해설

ㄱ → C. 사회적 배제: 사회적 배제는 고용·교육·사회적 관계 등 여러 영역에서 참여 기회와 자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현재 소득이 부족하다는 결과를 넘어 **빈곤에 이르게 된 사회적 과정과 맥락**을 살피려는 성찰에 해당한다. B의 상대적 빈곤은 사회의 일반적인 생활수준과 비교한 자원·소득의 부족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ㄴ → A. 신빈곤: 신빈곤의 주요 양상에는 **일을 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이 포함된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더라도 저임금이나 불안정한 고용으로 충분하고 지속적인 소득을 얻지 못하면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경제활동 참여만으로 빈곤 탈출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성찰과 연결된다.

ㄷ → D. 정상화: 정상화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생활조건과 생활양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장애인을 특정한 기준에 맞게 바꾼다는 뜻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동등하게 생활하고 참여할 조건**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성찰에 해당한다.

ㄹ → E. 사회행동: 사회행동은 불리한 처지에 있는 집단이 조직적인 요구와 압력을 통해 자원 배분이나 제도를 바꾸려는 실천이다. 일인시위와 거리행진으로 복지예산 부족을 이슈화하는 것은 **정책 결정에 압력을 가해 변화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F의 지역사회개발이 주민의 폭넓은 참여와 협력으로 공동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는 것과 구별된다.

이 대응을 모으면 ㄱ: C, ㄴ: A, ㄷ: D, ㄹ: E로, ②의 연결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는 경우
ㄷ. 장애인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ㄹ. 보조견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보조견이나 장애인보조기구는 장애인의 활동을 돕는 수단이므로,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되는 차별에 포함된다.

보기별 해설

ㄱ. O: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는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를 차별로 규정한다.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공하는 시설·도구·서비스 등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제4조제2항).

ㄴ. O: 제4조제1항제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한다. 장애인을 실제로 배제하는 행위뿐 아니라 **그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도 금지한다는 뜻이다.

ㄷ. O: 제4조제1항제6호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 방해**를 차별로 규정한다. 장애인의 활동을 돕는 기구의 사용을 막는 것도 법이 금지하는 차별에 포함된다.

ㄹ. O: 제4조제1항제6호는 장애인보조기구뿐 아니라 **보조견의 정당한 사용 방해**도 차별로 규정한다. 보호 대상이 기구에 한정되지 않고 장애인을 돕는 보조견의 사용에도 미친다.

ㄱ·ㄴ·ㄷ·ㄹ은 모두 법이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를 모두 포함한 조합은 ④이다.

NoteBase

문 20. 사회복지실천의 개념 중 '사회복지사가 과거에 다른 사람에게 가졌던 감정을 현재의 클라이언트에게서 느끼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은?

① 라포(rapport)
② 자유연상(free association)
③ 역전이(counter-transference)
④ 임파워먼트(empowerment)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과거 관계에서 느꼈던 감정을 현재 클라이언트에게 다시 느끼는 현상은 **역전이**이다. 감정의 주체가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사회복지사라는 점이 핵심이다.

공통 해설

역전이(counter-transference)는 사회복지사가 과거의 중요한 타인에게 가졌던 감정을 현재의 클라이언트에게 무의식적으로 다시 느끼는 현상이다. 판단 기준은 **사회복지사 자신의 과거 관계에서 비롯된 감정**이 현재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되살아나는지이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가 과거 자신을 통제하던 사람에게 느꼈던 반감을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클라이언트에게 느낀다면 역전이에 해당한다. 문제에서도 감정을 느끼는 주체가 사회복지사이고, 그 감정의 바탕이 과거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이므로 역전이의 정의에 부합한다. 반대로 클라이언트가 과거의 중요한 타인에게 가졌던 감정을 사회복지사에게 느끼는 것은 전이이다.

NoteBase